

KERI Brief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jm@keri.org)

본 보고서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을 말하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21년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 원(9%) 증가했고, 그 규모도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명(8.8%) 늘릴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완화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 원, 4사분기에는 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약 31~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

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 배율은 각각 6.25 → 6.91(0.65 증가), 5.46 → 6.29(0.83 증가), 6.03 → 6.46(0.43 증가), 5.28 → 6.30(1.02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기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3.6만 원, 4.9만 원, 6.0만 원, 5.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지속성이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자리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I. 서론

□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등 불안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작년 9월에 비해 39.2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로써 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

- 취업자 수 7개월 연속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3개월 간 감소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

○ 정부는 코로나19 핵심 대응 전략이라는 취지 하에 '일자리 200만 개 유지·창출'을 내세우며 내년에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올해(5조 7,074억 원)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8조 6,3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접일자리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내년에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약 3조 1,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

○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할 예정

○ 노인돌봄 3.3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만 개, 자활근로 5.8만 개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분야 등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2.6만 개 지원 예정

□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정책을 진단

○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 시행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변화를 검토

○ 향후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도출

II. 공공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수 현황

- 공공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¹⁾ 중 ‘직접일자리사업’을 말하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임²⁾
- 낮은 실업소득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하고,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³⁾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하고 있음
- 그 유형으로는 공공업무지원형,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등으로 구분되며 일자리는 다음과 같음
 - (공공업무지원)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전문분야 강사 지원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 다만, 지속·반복참여가 불가능해야 함

- (소득보조형) 저소득층 어르신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재택일자리 제공, 여름철 하천쓰레기수거 사업 등
- (인턴형) 청년들의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보조(일경험) 사업, 기업수요에 맞춘 청년·중장년·여성 인턴십 운영 등
- (사회봉사·복지형) 중장년 경력활용 봉사활동 사업, 어르신 재능기부 사업, 청년 자원봉사활동 사업 등

-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020년(25.5조 원, 본예산) 대비 5.1조 원(20.0%)이 늘어난 30.6조 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음

-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2) 고용노동부,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0.6.
- 3) 예)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표 1〉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일자리 예산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6,039
전년대비 증가율	(8.0)	(13.0)	(17.9)	(20.1)	(20.0)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4.0 [400.5조]	4.2 [428.5조]	4.5 [470.5조]	5.0 [512.3조]	5.5 [555.8조]

〈표 2〉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 원)

대상	총 예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20년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21년	306,039	31,164	22,754	17,694	82,697	26,342	125,387

자료: 고용노동부,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보도참고자료, 2020.9.1.

〈표 3〉 직접일자리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부처명	총 예산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산림청	여성부	환경부	경찰청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특허청
'21년	31,164	1,138	23,982	2,761	1,446	236	548	540	373	9	66	53	11
비중	-	3.7	76.9	8.9	4.6	0.8	1.8	1.7	1.2	-	0.2	0.1	-

〈표 4〉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안)
예산	1.9	1.5	1.9	1.7	2	2.3	2.86	3.11
(전년대비 증가율)	-	△21.1	6.7	6.3	17.6	15.0	26.1	9.0

자료: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https://eboard.moel.go.kr/i>)

○ 한편,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행안안전부, 산림청의 예산이 대부분임(94.1%)

□ 2021년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 원이며 전년 대비 2,577억 원(9%) 증가했고, 그 규모는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명(8.8%) 늘릴 예정임

○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매우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 원의 예산이 배분됨

○ 규모(일자리 수)도 2017년(13.1%)과 2019년(21.8%)에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는 그 이유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표 5〉 직접일자리사업 규모 현황

(단위: 만 명,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안)
참여인원	56.8	58.3	62.6	70.8	72.8	88.7	94.5	102.8
(전년대비 증가율)	-	2.6	7.4	13.1	2.8	21.8	6.5	8.8

자료: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https://eboard.moel.go.kr/>)

- 특히, 공공일자리 중 노인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68.8%(2019년), 78.3%(2020년), 76.4%(2021년)으로 70%를 웃돌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⁴⁾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일자리가 노인 관련 일자리인 점은 적절하지 않음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⁵⁾ 대부분 노인일자리 위주인 소득보조형으로 추진되었고 취업연계가 미흡해서, 민간일자리로의 이동가능성이 높은 공공업무지원형과 인턴형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은 82만 명이 참여해서 계획(88.7만 개)보다 성과가 낮았고, 그 중 노인이 69.8만 명으로 85.1%를 차지하고 있어 계획(61만 개)보다 노인일자리비중이 더 높았음

- 다만,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제고(39.9%→51.8%), 반복참여율 하락(20.8%→16.4%) 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사업은 81.4만 명이 참가해서 계획(72.8만 개) 이상의 성과를 보였고, 노인일자리는 56만 개를 수행해서 68.8%의 비중으로 나타났음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높아졌고(36.6%→39.9%), 반복참여 제한 강화⁶⁾로 반복참여율 지표가 크게 개선(39.2%→20.8%)되었다고 함

4) 노인일자리 규모(만 개): ('19년) 61.0 → ('20년) 74.0 → ('21년) 78.5.

5)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19년 사업 평가 및 운영 개선)", 2020.5.26.;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2020.5.7.

6)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율: 3년간 2회 이상 참여하면 반복 참여로 간주

III. 소득분배 구조와 5분위 배율 변화 검토

□ 정부는 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막대한 예산을 소요

-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소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진단할 필요
-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과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확대 시행되었던 2019년의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및 소득항목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5분위 배율의 변화를 점검하고자 함
 - 현재 이용가능한 가계동향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 2사분기 자료이지만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이 변경되면서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
 - 이런 이유로 시계열 상에서 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4사분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과 2019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및 소득항목 구조변화를 검토하고자 함

□ 가계동향조사 2017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위별 소득수준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변화와 5분위 배율 변화를 검토

- 구체적으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총소득기준 분위별 소득수준 및 소득항목을 살펴보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변화 및 소득불평등도를 검토

- 통계청에서는 현재 전국기준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5분위별 소득수준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기반으로 하는 5분위 배율을 공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여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발표하는 소득분포의 결과가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국기준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5분위별 소득분포와 5분위 배율 변화를 추가로 제시하려 함
 - 공개자료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위별 소득수준을 추계하는 경우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소득분위별 소득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분위구분 방법과 일반 통계패키지에서 사용하는 분위구분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용 데이터에서는 지역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통계청의 내부적 기준인 지역배분 기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 공표자료와 마이크로 데이터 추산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
- 2017년과 2019년의 소득수준 변화에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소득수준의 변화를 공공일자리 정책의 온전한 결과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정책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수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2017년과 2019년의 소득수준 변화에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경제사회적 이벤트가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하지만 공공일자리 정책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된 공공일자리 정책 시행이 저소득층의 소득충격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2017년과 비교해 정부의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 정책이 확대되었던 2019년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2017년과 비교하여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2017년 1사분기 대비 2019년 1사분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4.1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17.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17.1만 원, 4사분기에는 약 22.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소득2분위 기준으로도 4사분기를 제외한 1~3사분기에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구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2019년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 원, 4사분기에는 약 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1인 이상 가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득 1분위 뿐만 아니라 소득 2분위에서도 1~4사분기 근로소득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증가율 측면에서는 1분위의 분기별 근로소득 감소폭이 약 31~42%인 것으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근로소득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된 시기가 연체인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공일자리 정책이 확대 시행되었던 2019년 1사분기~4사분기 대부분의 기간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보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요인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정책이 확대 시행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이 저소득층에 미친 외부적 소득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직접고용형태인 공공일자리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주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취업하려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을 가능성

-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와 함께 이전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항목이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가처분소득도 2017년과 비교해 2019년 1~4사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2017년 대비 2019년 분위별 소득 변화(총소득 기준, 전국 2인 이상)

(단위: 천 원, %)

Q1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43.8	-10.3	-141.2	-25.9	-175.4	-15.3
2분위	8.2	0.3	-15.7	-1.0	-87.1	-3.7
3분위	212.8	5.3	103.8	4.1	30.7	0.9
4분위	462.7	8.6	477.8	13.1	129.7	2.9
5분위	634.6	6.8	579.1	8.5	60.5	0.8
Q2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09.1	-7.6	-176.9	-28.7	-126.3	-10.7
2분위	49.7	1.7	-35.7	-2.1	-28.0	-1.2
3분위	259.5	6.6	190.4	7.4	103.6	3.2
4분위	483.5	9.3	489.9	13.5	187.4	4.4
5분위	1,140.5	13.8	1,019.3	17.4	625.5	9.4
Q3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41.9	-3.0	-170.7	-27.6	-97.4	-8.7
2분위	125.5	4.4	-30.3	-1.8	12.3	0.5
3분위	255.4	6.3	210.0	8.0	34.8	1.0
4분위	523.0	9.7	407.6	10.5	276.9	6.4
5분위	852.2	9.5	1,064.8	16.2	112.2	1.6
Q4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81.1	-12.0	-223.0	-32.7	-186.7	-15.2
2분위	25.2	0.9	49.6	3.0	-27.7	-1.2
3분위	249.9	6.2	366.9	14.3	97.3	3.0
4분위	524.0	9.9	540.4	14.4	330.7	7.7
5분위	1,009.2	11.9	1,084.9	18.0	517.8	7.7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표 7〉 2017년 대비 2019년 분위별 소득 변화(총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단위: 천 원, %)

Q1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03.3	-13.6	-47.4	-30.8	-116.2	-19.0
2분위	-122.4	-6.4	-74.4	-8.4	-161.7	-10.2
3분위	51.5	1.6	36.4	2.0	-78.9	-3.0
4분위	291.7	6.2	281.9	9.0	34.1	0.9
5분위	569.6	6.7	529.0	8.6	22.6	0.3
Q2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07.9	-13.7	-66.5	-35.5	-115.9	-17.6
2분위	-77.7	-4.0	-74.8	-7.7	-95.4	-6.0
3분위	120.2	3.8	48.9	2.5	10.9	0.4
4분위	299.3	6.5	331.8	10.7	71.5	1.9
5분위	966.1	12.7	836.3	15.7	481.0	7.9
Q3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63.8	-8.4	-75.8	-41.0	-75.2	-12.6
2분위	12.6	0.7	-89.8	-9.1	-41.5	-2.7
3분위	149.9	4.7	64.9	3.2	-1.8	-0.1
4분위	351.0	7.5	314.8	9.8	95.2	2.5
5분위	783.3	9.5	898.6	15.1	136.5	2.1
Q4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49.9	-18.1	-79.6	-41.8	-136.7	-20.2
2분위	-97.3	-4.9	-92.1	-8.9	-85.5	-5.3
3분위	86.6	2.7	106.3	5.3	-6.0	-0.2
4분위	347.2	7.5	446.7	14.6	158.9	4.2
5분위	957.9	12.3	991.2	17.9	516.8	8.4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하여 가처분소득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5분위 배율은 오히려 증가

○ 5분위 배율 산출을 위하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⁷⁾으로 소득분위를 나눌 수 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분위별 근로소득을 살펴보더라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은 소득 1분위에서 2019년 1~4사분기 동안 각각 6.3만 원, 10.3만 원, 9.0만 원, 10.4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4사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사료됨

-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짐

*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에서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9년 1~4사분기 각각 6.4만 원, 10.0만 원, 6.3만 원, 11.0만 원 감소하였음

*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각 분기별로 약 21~31%를 기록하여 2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보다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1분위의 경우 2019년 3사분기를 제외한 1, 2, 4사분기에서 감소하였으며, 3사분기에서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 저소득층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최고 소득층인 4분위, 5분위의 근로소득은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증가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에서 5분위 근로소득은 2019년 1~4사분기 동안 각각 36.3만 원, 56.3만 원, 51.0만 원, 62.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의 경우 2019년 1~4사분기 동안 2017년 대비 각각 39.3만 원, 55.9만 원, 29.0만 원, 43.6만 원 증가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득 5분위의 근로소득은 2019년 1~4사분기 동안 2017년 대비 각각 34.8만 원, 57.2만 원, 53.5만 원, 59.9만 원 증가하여 분기별로 약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의 경우 2019년 1~4사분기 동안 2017년 대비 각각 40.0만 원, 56.0만 원, 32.7만 원, 47.8만 원 증가하면서 7%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함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2017년 대비 2019년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오히려 5분위 배율은 상승하여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5분위 배율은 2017년 대비 2019년에 매분기 증가하였는데 1~4사분기 각각 5.35 → 5.80(0.45 증가), 4.73 → 5.30(0.57 증가), 5.18 → 5.37(0.19 증가), 4.61 → 5.26(0.65 증가)으로 증가하였음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여도 전반적으로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7년 대비 2019년에 5분위 배율 증가폭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처분가능 감소시기가 2인 이상 가구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7)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사적이전소득: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등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 배율은 각각 6.25 → 6.91(0.65 증가), 5.46 → 6.29(0.83 증가), 6.03 → 6.46(0.43 증가), 5.28 → 6.30(1.02 증가)으로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8〉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소득변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2인 이상)

(단위: 천 원, %)

Q1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3.1	0.4	-63.0	-15.2	
2분위	113.4	7.4	74.9	7.1	
3분위	187.3	9.1	23.6	1.5	
4분위	306.7	11.5	268.3	13.0	
5분위	393.4	8.9	362.5	9.7	0.45
Q2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13.0	1.5	-103.4	-22.1	
2분위	94.2	6.1	116.0	10.2	
3분위	179.1	8.9	88.5	5.6	
4분위	336.3	13.1	318.1	15.3	
5분위	558.7	13.9	563.3	17.9	0.57
Q3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24.2	2.9	-89.9	-19.6	
2분위	122.5	7.8	159.0	15.1	
3분위	185.3	9.0	9.8	0.6	
4분위	288.9	10.8	397.2	18.6	
5분위	289.5	6.6	510.3	14.2	0.19
Q4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27.2	-3.0	-103.7	-21.0	
2분위	79.3	5.0	148.1	13.3	
3분위	169.4	8.2	98.7	6.1	
4분위	327.6	12.4	413.5	19.6	
5분위	436.2	10.6	627.2	19.5	0.65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표 9〉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소득변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단위: 천 원, %)

Q1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8.2	-1.2	-64.4	-22.5	
2분위	86.2	6.0	35.5	3.9	
3분위	165.0	8.3	68.5	4.5	
4분위	285.3	11.0	244.6	12.3	
5분위	399.9	9.2	347.5	9.4	0.65
Q2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7.5	-1.0	-100.0	-29.8	
2분위	65.9	4.5	68.4	6.8	
3분위	156.8	8.1	95.5	6.3	
4분위	319.2	12.8	279.1	13.9	
5분위	559.8	14.1	571.6	18.4	0.83
Q3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2.8	0.4	-62.8	-21.0	
2분위	97.5	6.7	20.5	2.0	
3분위	171.1	8.6	124.7	8.0	
4분위	287.8	11.1	321.1	15.3	
5분위	327.2	7.6	535.2	15.2	0.43
Q4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49.0	-6.4	-109.6	-30.8	
2분위	60.7	4.1	93.1	9.3	
3분위	140.6	7.0	115.0	7.5	
4분위	308.7	12.0	414.5	20.6	
5분위	477.9	11.7	598.6	18.8	1.02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의 감소분은 공적이전소득⁸⁾의 증가로 보전된 것으로 보임

8) 가계동향조사 기준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의 정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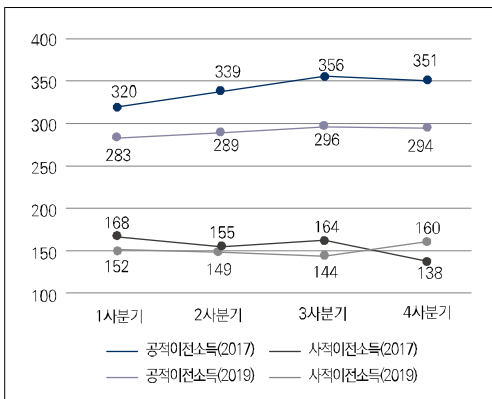
- 총소득 기준 저소득층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11.0만 원, 12.0만 원, 12.5만 원, 10.5만 원 증가
 - 민간이전소득⁹⁾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과 같은 증가폭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2019년 4분기에는 2017년 4분기 대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는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3.6만 원, 4.9만 원, 6.0만 원, 5.7만 원 증가
 - 민간이전소득의 경우에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며 2019년 4분기에는 2017년 대비 오히려 2.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과 민간이전소득의 증가폭이 더욱 분명히 대비됨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2017년 대비 2019년 분기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은 약 6.8~8.9만 원을 나타내는 반면 민간이전소득의 경우 0.7~2.8만 원 증가에 그침
- 범위를 확대한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도 소득 1분위의 2017년 대비 2019년 분기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은 약 5.3~7.8만 원을 나타낸 반면 민간이전소득의 경우 0.1~2.8만 원 증가를 기록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줄어든 근로소득은 다시 공적이전소득의 증대로 보완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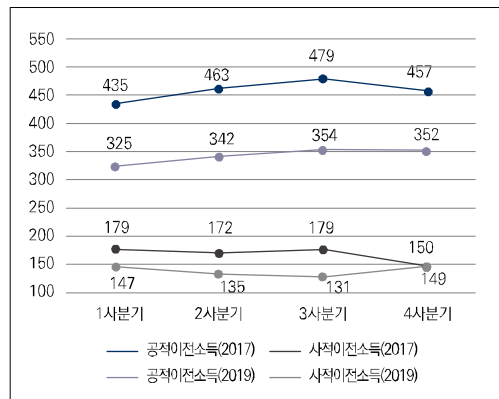
9) 가계동향조사 기준에 의하면 사적이전소득의 정의는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등을 의미

〈그림 1〉 2017년과 2019년 1분위의 이전소득 변화추이(총소득 기준)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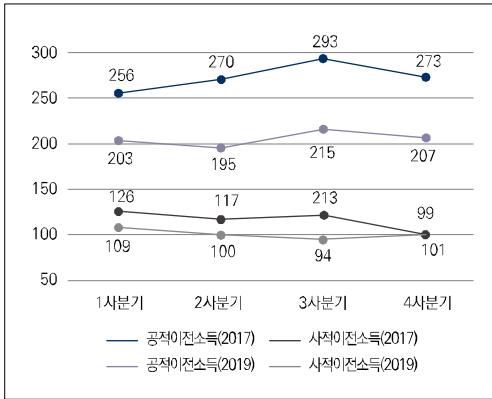
(전국, 1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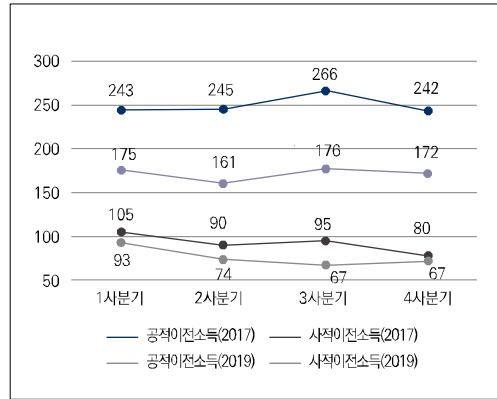
(전국, 2인 이상 가구)

〈그림 2〉 2017년과 2019년 1분위의 이전소득 변화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천 원)



(전국, 1인 이상 가구)



(전국, 2인 이상 가구)

IV. 요약 및 시사점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2021년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 원이며 전년 대비 2,577억 원(9%) 증가했고, 그 규모는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명(8.8%) 늘릴 예정임
 -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매우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 원의 예산이 배분됨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일자리 정책이 한창 시행되었던 2019년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총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혹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등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이용의 제약으로 2020년과의 비교는 불가하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2017년과 2019년을 분기별로 비교
 - 총소득,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2017년 1사분기 대비 2019년 1사분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4.1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17.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17.1만 원, 4사분기에는 약 22.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2019년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원, 4사분기에는 약 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증가율 측면에서는 1분위의 분기별 근로소득 감소폭이 약 31~42%인 것으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근로소득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년 대비 2019년 소득분위별 소득에서도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9년 1~4사분기 동안 각각 6.3만 원, 10.3만 원, 9.0만 원, 10.4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인 이상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에서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9년 1~4사분기 각각 6.4만 원, 10.0만 원, 6.3만 원, 11.0만 원 감소하였음
 - *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각 분기별로 약 21~31%를 기록하여 2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보다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2017년 대비 2019년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5분위 배율은 상승하여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2인 가구 기준 5분위 배율은 2017년 대비 2019년에 매분기 증가하였는데 1~4사분기 각각 0.45, 0.57, 0.19, 0.65 포인트 증가(소득불평등이 심화)하였음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할 경우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 배율은 각각 0.65, 0.83, 0.43, 1.02 포인트 증가하여(소득불평등이 심화) 증가폭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상기의 동 기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보전한 것으로 사료됨
 - 총소득 기준 저소득층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11.0만 원, 12.0만 원, 12.5만 원, 10.5만 원 증가

-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는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3.6만원, 4.9만원, 6.0만원, 5.7만원 증가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국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2017년 대비 2019년 분기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은 약 6.8~8.9만원을 기록
 - 범위를 확대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국 1인 가구 기준에서도 소득 1분위의 2017년 대비 2019년 분기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은 약 5.3~7.8만원을 나타냄
- 2019년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불안한 국내 외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대비 2019년의 각 분기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온전히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음
- 다만 이러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시행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지속성이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
- 물론 올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복지정책의 범주에서 선별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 부분임
- 정부에서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단기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여 지속성이 길지 않아 또 다시 근로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만 기대어 주체적인 근로의욕이 약화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주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취업하려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취업과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다른 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었을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저소득층이 취업할 수 있었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는 오히려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
- 일자리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 공공일자리의 경우 노인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취업 연계가 어렵고 민간일자리의 이동가능성이 낮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노인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
- 민간 부문에서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필요한 고령자의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의 확대를 제도화할 필요
 - 노인 인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인력 중심의 사업을 민관이 함께 발굴할 필요

〈 부 표 〉

〈부표 1〉 2017년 대비 2019년 소득소득 분위별 변화(총소득 기준, 전국 2인 이상)

(단위: 천 원, %)

2017.Q1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1,398.5		545.6		1,143.5	
2분위		2,835.5		1,549.6		2,362.3	
3분위		4,025.9		2,529.2		3,332.0	
4분위		5,400.3		3,638.9		4,438.0	
5분위		9,290.4		6,831.7		7,501.2	
2019.Q1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1,254.7		404.4		968.1	
2분위		2,843.7		1,533.8		2,275.2	
3분위		4,238.7		2,633.0		3,362.7	
4분위		5,863.1		4,116.7		4,567.7	
5분위		9,925.0		7,410.9		7,561.7	
Q1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43.8	-10.3	-141.2	-25.9	-175.4	-15.3	
2분위	8.2	0.3	-15.7	-1.0	-87.1	-3.7	
3분위	212.8	5.3	103.8	4.1	30.7	0.9	
4분위	462.7	8.6	477.8	13.1	129.7	2.9	
5분위	634.6	6.8	579.1	8.5	60.5	0.8	
2017.Q2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1,434.6		615.6		1,175.8	
2분위		2,861.4		1,700.8		2,360.5	
3분위		3,934.5		2,560.6		3,232.8	
4분위		5,176.9		3,619.0		4,259.9	
5분위		8,285.4		5,859.7		6,626.0	
2019.Q2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1,325.5		438.7		1,049.4	
2분위		2,911.1		1,665.1		2,332.5	
3분위		4,194.0		2,751.0		3,336.4	
4분위		5,660.4		4,108.9		4,447.3	
5분위		9,426.0		6,879.0		7,251.5	
Q2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09.1	-7.6	-176.9	-28.7	-126.3	-10.7	
2분위	49.7	1.7	-35.7	-2.1	-28.0	-1.2	

3분위	259.5	6.6	190.4	7.4	103.6	3.2
4분위	483.5	9.3	489.9	13.5	187.4	4.4
5분위	1,140.5	13.8	1,019.3	17.4	625.5	9.4
2017.Q3	총소득		근로소득		가치분소득	
1분위	1,416.3		618.4		1,123.1	
2분위	2,856.6		1,667.1		2,350.9	
3분위	4,063.9		2,610.2		3,323.6	
4분위	5,380.9		3,864.4		4,326.7	
5분위	8,948.1		6,559.5		7,226.9	
2019.Q3						
1분위	1,374.4		447.7		1,025.7	
2분위	2,982.1		1,636.7		2,363.2	
3분위	4,319.3		2,820.2		3,358.4	
4분위	5,903.9		4,272.0		4,603.6	
5분위	9,800.2		7,624.3		7,339.1	
Q3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41.9	-3.0	-170.7	-27.6	-97.4	-8.7
2분위	125.5	4.4	-30.3	-1.8	12.3	0.5
3분위	255.4	6.3	210.0	8.0	34.8	1.0
4분위	523.0	9.7	407.6	10.5	276.9	6.4
5분위	852.2	9.5	1,064.8	16.2	112.2	1.6
2017.Q4	총소득		근로소득		가치분소득	
1분위	1,504.8		681.4		1,227.5	
2분위	2,912.2		1,630.7		2,389.1	
3분위	4,038.3		2,559.0		3,289.3	
4분위	5,316.7		3,751.9		4,291.6	
5분위	8,449.7		6,032.0		6,687.9	
2019.Q4						
1분위	1,323.7		458.4		1,040.7	
2분위	2,937.5		1,680.3		2,361.3	
3분위	4,288.2		2,925.9		3,386.6	
4분위	5,840.7		4,292.3		4,622.4	
5분위	9,458.9		7,116.9		7,205.6	
Q4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81.1	-12.0	-223.0	-32.7	-186.7	-15.2
2분위	25.2	0.9	49.6	3.0	-27.7	-1.2
3분위	249.9	6.2	366.9	14.3	97.3	3.0
4분위	524.0	9.9	540.4	14.4	330.7	7.7
5분위	1,009.2	11.9	1,084.9	18.0	517.8	7.7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부표 2〉 2017년 대비 2019년 소득분위별 소득 변화(총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단위: 천 원, %)

2017.Q1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761.2		154.1		611.0	
2분위	1,920.0		889.2		1,591.6	
3분위	3,187.1		1,860.4		2,643.3	
4분위	4,725.8		3,128.1		3,878.6	
5분위	8,459.9		6,119.1		6,827.7	
2019.Q1						
1분위	658.0		106.7		494.9	
2분위	1,797.6		814.8		1,429.9	
3분위	3,238.7		1,896.8		2,564.5	
4분위	5,017.5		3,410.0		3,912.6	
5분위	9,029.5		6,648.0		6,850.3	
Q1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03.3	-13.6	-47.4	-30.8	-116.2	-19.0
2분위	-122.4	-6.4	-74.4	-8.4	-161.7	-10.2
3분위	51.5	1.6	36.4	2.0	-78.9	-3.0
4분위	291.7	6.2	281.9	9.0	34.1	0.9
5분위	569.6	6.7	529.0	8.6	22.6	0.3
2017.Q2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789.8		187.3		657.7	
2분위	1,924.2		971.3		1,587.5	
3분위	3,170.7		1,989.8		2,598.8	
4분위	4,569.9		3,114.3		3,727.4	
5분위	7,625.2		5,343.4		6,126.9	
2019.Q2						
1분위	681.9		120.8		541.9	
2분위	1,846.5		896.5		1,492.1	
3분위	3,290.9		2,038.6		2,609.7	
4분위	4,869.2		3,446.1		3,799.0	
5분위	8,591.3		6,179.8		6,608.0	
Q2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07.9	-13.7	-66.5	-35.5	-115.9	-17.6
2분위	-77.7	-4.0	-74.8	-7.7	-95.4	-6.0
3분위	120.2	3.8	48.9	2.5	10.9	0.4
4분위	299.3	6.5	331.8	10.7	71.5	1.9
5분위	966.1	12.7	836.3	15.7	481.0	7.9

2017.Q3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764.2		185.0		597.5	
2분위	1,919.3		987.1		1,548.4	
3분위	3,205.8		2,000.0		2,635.8	
4분위	4,711.2		3,223.0		3,801.5	
5분위	8,212.2		5,949.0		6,609.8	
2019.Q3						
1분위	700.4		109.2		522.3	
2분위	1,931.8		897.3		1,506.9	
3분위	3,355.7		2,064.9		2,634.0	
4분위	5,062.2		3,537.8		3,896.8	
5분위	8,995.5		6,847.6		6,746.3	
Q3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63.8	-8.4	-75.8	-41.0	-75.2	-12.6
2분위	12.6	0.7	-89.8	-9.1	-41.5	-2.7
3분위	149.9	4.7	64.9	3.2	-1.8	-0.1
4분위	351.0	7.5	314.8	9.8	95.2	2.5
5분위	783.3	9.5	898.6	15.1	136.5	2.1
2017.Q4						
1분위	830.0		190.1		676.2	
2분위	1,988.6		1,035.2		1,623.0	
3분위	3,235.1		2,016.0		2,634.4	
4분위	4,654.4		3,049.2		3,758.7	
5분위	7,777.3		5,542.7		6,161.3	
2019.Q4						
1분위	680.2		110.6		539.5	
2분위	1,891.3		943.0		1,537.5	
3분위	3,321.7		2,122.3		2,628.4	
4분위	5,001.6		3,495.8		3,917.6	
5분위	8,735.2		6,533.9		6,678.1	
Q4 증감	총소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천 원	%	천 원	%	천 원	%
1분위	-149.9	-18.1	-79.6	-41.8	-136.7	-20.2
2분위	-97.3	-4.9	-92.1	-8.9	-85.5	-5.3
3분위	86.6	2.7	106.3	5.3	-6.0	-0.2
4분위	347.2	7.5	446.7	14.6	158.9	4.2
5분위	957.9	12.3	991.2	17.9	516.8	8.4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부표 3〉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소득변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2인 이상)

(단위: 천 원, %)

2017.Q1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829.8		413.8		
2분위	1,539.8		1,053.9		
3분위	2,054.5		1,607.3		
4분위	2,662.9		2,069.9		
5분위	4,436.1		3,749.1		5.35
2019.Q1					
1분위	832.9		350.8		
2분위	1,653.2		1,128.8		
3분위	2,241.8		1,630.9		
4분위	2,969.6		2,338.2		
5분위	4,829.5		4,111.6		5.80
Q1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3.1	0.4	-63.0	-15.2	
2분위	113.4	7.4	74.9	7.1	
3분위	187.3	9.1	23.6	1.5	
4분위	306.7	11.5	268.3	13.0	
5분위	393.4	8.9	362.5	9.7	0.45
2017.Q2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852.8		466.8		
2분위	1,545.3		1,135.0		
3분위	2,011.0		1,584.5		
4분위	2,566.0		2,073.9		
5분위	4,032.8		3,146.1		4.73
2019.Q2					
1분위	865.7		363.4		
2분위	1,639.5		1,251.0		
3분위	2,190.1		1,673.0		
4분위	2,902.4		2,392.0		
5분위	4,591.4		3,709.4		5.30
Q2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13.0	1.5	-103.4	-22.1	
2분위	94.2	6.1	116.0	10.2	
3분위	179.1	8.9	88.5	5.6	
4분위	336.3	13.1	318.1	15.3	
5분위	558.7	13.9	563.3	17.9	0.57

2017.Q3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842.2		458.3		
2분위		1,560.4		1,054.5		
3분위		2,062.6		1,727.9		
4분위		2,667.5		2,136.6		
5분위		4,364.0		3,605.0		5.18
2019.Q3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866.4		368.5		
2분위		1,682.8		1,213.5		
3분위		2,247.9		1,737.7		
4분위		2,956.5		2,533.8		
5분위		4,653.4		4,115.3		5.37
Q3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24.2	2.9	-89.9	-19.6		
2분위	122.5	7.8	159.0	15.1		
3분위	185.3	9.0	9.8	0.6		
4분위	288.9	10.8	397.2	18.6		
5분위	289.5	6.6	510.3	14.2	0.19	
2017.Q4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895.4		493.7		
2분위		1,589.7		1,111.6		
3분위		2,072.3		1,627.1		
4분위		2,647.9		2,107.8		
5분위		4,130.3		3,223.3		4.61
2019.Q4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868.2		390.0		
2분위		1,669.0		1,259.7		
3분위		2,241.7		1,725.8		
4분위		2,975.5		2,521.3		
5분위		4,566.6		3,850.5		5.26
Q4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27.2	-3.0	-103.7	-21.0		
2분위	79.3	5.0	148.1	13.3		
3분위	169.4	8.2	98.7	6.1		
4분위	327.6	12.4	413.5	19.6		
5분위	436.2	10.6	627.2	19.5	0.65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부표 4〉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소득변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단위: 천 원, %)

2017.Q1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697.5		286.2		
2분위		1,437.6		921.4		
3분위		1,979.6		1,506.2		
4분위		2,594.5		1,992.3		
5분위		4,362.4		3,678.3		6.25
2019.Q1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689.3		221.8		
2분위		1,523.7		957.0		
3분위		2,144.6		1,574.7		
4분위		2,879.8		2,236.9		
5분위		4,762.3		4,025.8		6.91
Q1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8.2	-1.2	-64.4	-22.5		
2분위	86.2	6.0	35.5	3.9		
3분위	165.0	8.3	68.5	4.5		
4분위	285.3	11.0	244.6	12.3		
5분위	399.9	9.2	347.5	9.4	0.65	
2017.Q2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729.4		335.1		
2분위		1,453.0		999.9		
3분위		1,944.6		1,510.6		
4분위		2,500.4		2,004.7		
5분위		3,979.5		3,098.9		5.46
2019.Q2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721.9		235.1		
2분위		1,518.9		1,068.3		
3분위		2,101.3		1,606.1		
4분위		2,819.6		2,283.8		
5분위		4,539.2		3,670.5		6.29
Q2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7.5	-1.0	-100.0	-29.8		
2분위	65.9	4.5	68.4	6.8		
3분위	156.8	8.1	95.5	6.3		
4분위	319.2	12.8	279.1	13.9		
5분위	559.8	14.1	571.6	18.4	0.83	

2017.Q3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712.1		298.5		
2분위		1,458.2		1,011.0		
3분위		1,987.9		1,550.5		
4분위		2,592.5		2,093.7		
5분위		4,291.2		3,525.0		6.03
2019.Q3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714.9		235.7		
2분위		1,555.7		1,031.5		
3분위		2,159.0		1,675.2		
4분위		2,880.3		2,414.8		
5분위		4,618.4		4,060.1		6.46
Q3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2.8	0.4	-62.8	-21.0		
2분위	97.5	6.7	20.5	2.0		
3분위	171.1	8.6	124.7	8.0		
4분위	287.8	11.1	321.1	15.3		
5분위	327.2	7.6	535.2	15.2	0.43	
2017.Q4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771.4		356.0		
2분위		1,488.0		1,005.2		
3분위		2,007.7		1,532.7		
4분위		2,582.9		2,016.4		
5분위		4,071.3		3,190.4		5.28
2019.Q4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1분위		722.4		246.4		
2분위		1,548.7		1,098.3		
3분위		2,148.3		1,647.8		
4분위		2,891.6		2,430.8		
5분위		4,549.3		3,789.0		6.30
Q4 증감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천 원	%	천 원	%		
1분위	-49.0	-6.4	-109.6	-30.8		
2분위	60.7	4.1	93.1	9.3		
3분위	140.6	7.0	115.0	7.5		
4분위	308.7	12.0	414.5	20.6		
5분위	477.9	11.7	598.6	18.8	1.02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